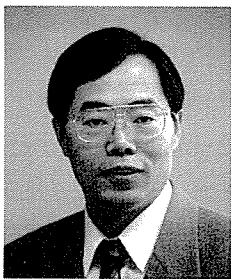


과학기술은 大選 주자들의 들러리인가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는
과학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을 들러리로 여기는
위장된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張在烈
(중앙일보 정보과학부차장)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과학기술은 제 철을 만난다.

한 표라도 아쉬운 대선 주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너도 나도 과학기술의 전도사가 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금년은 특히 10여명의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있어 과학기술 공약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날 그 모습은 마치 버려진 아이를 돌보는 고아원장과 흡사하다. “이제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들은 큰 기대감에 부풀어 좋은 소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곤 하지만 높은 사람이 가버리면 찬 바람만 불어올 뿐이다.

공약 들러리 과학기술과 우리의 자화상

선거 때만 되면 과학기술은 표를 기대하는 후보자들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 과학기술인들은 후보자들의 말을 듣고 꿈에 부풀었으나 결과는 실망과 푸념이었다. 92년 14대 대통령선거 공약중 대표적인 공약(空約)을 보자.

- 정부조직을 개편해 과기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한다.
- 청와대에 과기특보를 임명한다.
- 국방예산의 5%를 연구개발로 돌린다. (97년 3%)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부담을 25%까지 높인다. (95년 19%)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없다. 반대로 항의도 없다. 서로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겨버린다. ‘왜일까’ 과학기술이 대선 주자들의 들러리이고 구색맞추기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 정도는 지켜지건 말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올 초 과학기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5%의 기자가 “신문사에서의 과학기사는 구색맞추기용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내부에서 과학기사를 경시하고 과학기술의 역할을 이해 못하는 현실에서 대선 주자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이런 사회의 한 자화상을 보자. 한보사태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안전사고는 꼬리를 물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과학경시 풍토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학의 기본 정신은 합리성의 추구다. 한보사태에서

보듯 어느 기관도 합리성의 바탕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수많은 감독기관이 있었으나 한보의 허점을 잡아내지 못했다.

과학정신이 잘 구현된 사회라면 한보의 무모함이 그렇게 허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디선가 불합리한 것이 드러나 1조원이 넘는 부도와 이 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21세기는 코 앞인데 우리는 낡새나는 과거청산에 정신이 없다. 21세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부패청문회를 한달동안 계속했다.

과학기술 육성하 지도자, 정치도 잘해

그러나 지금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체념할 때가 아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후보는 21세기를 여는 지도자다. 그 지도자가 과학기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가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종대왕,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대통령 등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발전시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지도자들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을 잘 이끈 지도자는 많다. 이들은 정치에서도 성공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한다.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삼아 발전시킨 국가원수는 정치에서도 성공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이다. 대선 주자들은 한번 과거 훌륭한 국가지도자들이 어떻게 과학기술을 다루었는지 벤치마킹해 볼 일이다. 과학기술을 혁신한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을 대선

주자들은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단기간에 성공할 수도 없고 인기도 높지 않다. 그래서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끌여가기가 어렵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인 나라에서는 국가 원수의 역할이 지대하다.

실제로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며 일본의 총리도 일본과학기술회의 의장이다. 이들은 장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나서고 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살아나는 것은 부시에 이어 클린턴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드라이브 정책을 펴온 덕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정책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을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다음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지난 5월 21일 한 대선 주자는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학기술이 우리경제 살리기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술입국에 실패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듯 했다. 우리의 맹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아는 듯 했다.

앞으로 10여명의 대선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과학기술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이미 그 서곡은 울렸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얼마나 마음깊이 과학기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보좌관이 만들어 준 원고를 읽고 있는 수준이라면 전철을 되풀이 할 것이 틀림없다.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인물 찾아야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는 과학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가려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흔히 과학기술인들은 실험실에만 박혀있는 딱 막힌 사람으로 간주돼 왔다.

이제 실험실에 꼭 박혀 있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필요하다면 대선캠프에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대선 주자들이 뼈속 깊이 깨우치도록 해야 하며 과학기술을 들러리로 여기는 위장된 대선 주자를 가려내야 한다.

그들 주위에 어떤 인물이 포진하고 있는지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과학기술인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크고 강하게 내야할 것이다. 수많은 과학행정전문가들이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약속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것도 과학기술인의 몫이다. 과학기술계가 나서면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육성해 21세기의 초석을 놓은 인물로 기억에 남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학기술을 들러리로 아는 대선 주자는 껌데기 정치인이다. 껌데기는 가라. ⑤7